

		보 도 자 료	
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		배포일시	2018. 9. 11.(화) 총 7매(본문 4매)
담당 부서		도시재생 역량과	- 과장 정우진, 사무관 김태웅 ☎ (044)201-4911, 201-4917
		기능개선총괄팀	- 팀장 여중협, 사무관 임영택 ☎ (02)397-2510, 397-2513
		커뮤니티 케어 추진단	- 팀장 임강섭, 사무관 김수민 ☎ (044)202-3691, 202-3693
보 도 일 시		2018년 9월 11일(화) 16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해 행안부·복지부·국토부 손을 맞잡다 -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·돌봄·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-

□ 서울 광진구의 “공유공간 나눔”은 ‘광진주민연대’, ‘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’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 센터 및 병원·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·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.

-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*하고 도시쇠퇴가 진행**되는 상황에서 “공유공간 나눔”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.

* 인구변화 : '11년 372천명 → '16년 357천명

** 건축물 노후화 : 25천개의 건축물 중 17.5천개 노후화(69.9%, '16.11월 기준)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, 이하 행안부)와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, 이하 복지부),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 및 돌봄·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“공유공간 나눔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-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▲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, ▲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, ▲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·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, ▲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 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①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

- 행안부의 자치, 복지부의 돌봄,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·요양·복지·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공간조성), 주민자치회(주민수요 발굴),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(돌봄·의료서비스 제공)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 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.
-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,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(행안부)하고,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·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(복지부)하며,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(국토부)할 계획이다.

② 공모사업 간 연계

-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,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“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”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“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” 분야와 “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”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.

< 커뮤니티케어(Community Care)란? >

- 돌봄(Care)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(Community)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,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

- 또한,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'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“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*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,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* '18년 뉴딜사업 선정 시, 역사·문화, 경관특화, 골목상권, 여성친화, 대학타운형, 농촌특화, 건축자산 등 7개 유형에서 총 11곳 사업 선정

③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·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-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·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,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.
- 행안부는 자치·돌봄·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·면·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,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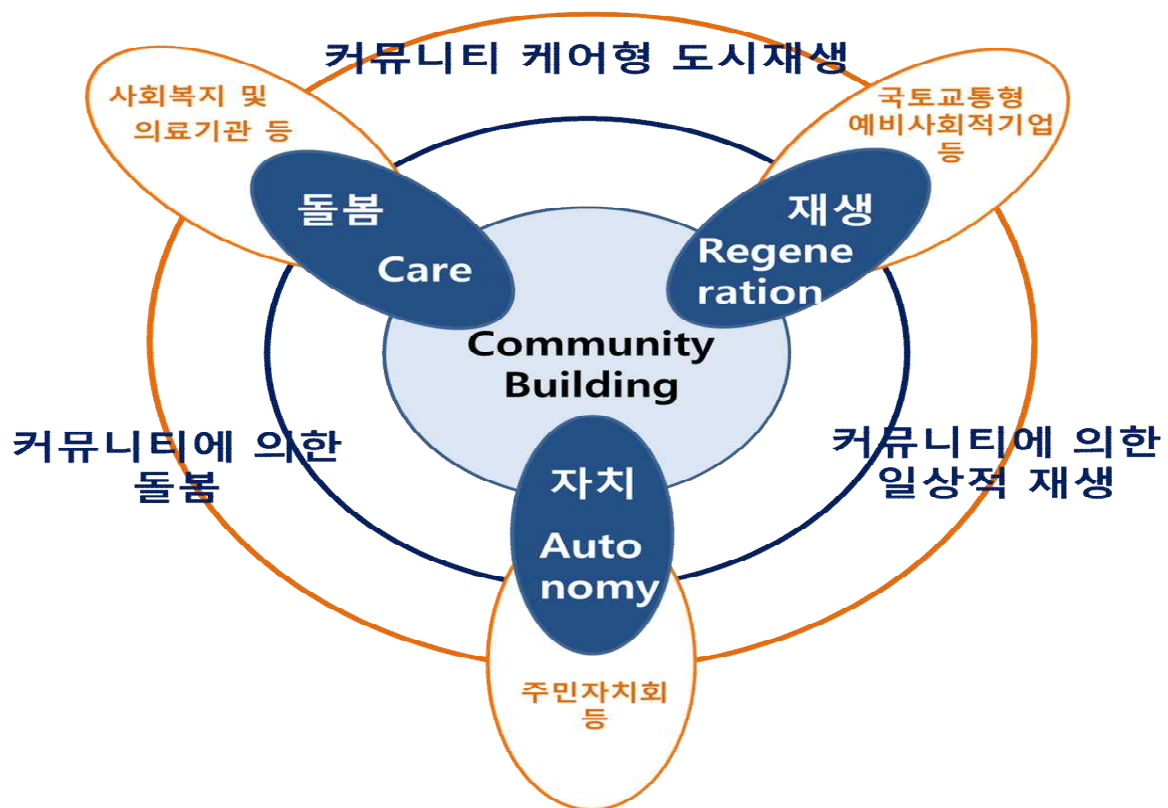
④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

-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.

□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“포용사회,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, 각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.” 라며, “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,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-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“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, 행안부·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-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<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모형도 >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안전부 기능개선총괄팀 임영택 사무관(☎ 02-397-2513) 또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김수민 사무관(☎ 044-202-3693)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태웅 사무관(☎ 044-201-49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지역사회 중심의 자치·돌봄·재생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· 보건복지부 · 국토교통부 업무협약서

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(이하 “3개 부처”라 한다)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, 도시쇠퇴에 대응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와 풀뿌리 자치분권,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,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,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등 관련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상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실질적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사항) 3개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·협력한다.

가. 행정안전부-보건복지부 협력사항

- (1) 보건복지부의 ‘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’ 공모 시, 주민 주도의 보건복지 · 공공 서비스 연계 협력분야(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)를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선정·관리한다.
- (2) 읍·면·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인력 · 연계협력 및 기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.

나. 행정안전부-국토교통부 협력사항

- (1) 국토교통부의 ‘소규모 재생사업’ 공모 시,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을 특화 지원하는 분야(행안부 협력형)를 별도로 선정·관리한다.
- (2)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가꾸기를 위한 읍·면·동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공동체지원센터-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.

다. 보건복지부-국토교통부 협력사항

- (1) 도시재생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동일 지역에서 실시되도록 국토부는 '커뮤니티 케어형 뉴딜사업'을 선정하고, 복지부는 선도사업 선정 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평가항목에 반영한다.
- (2)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등 복지서비스가 통합·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- (3)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와 마이홈센터(LH)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이 통합·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라. 3개 부처 협력사항

- (1) '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*' 및 '공공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**' 시범사업을 통해 3개 부처 사업의 지역사회 내 융합을 모색한다.
 - * 주민참여를 토대로 주민들의 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도출한 후,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·제공
 - ** 인구 감소지역에서 중심지역(동 또는 읍)에 공공서비스를 집약시키고 주변지역은 주민자치 위주로 개편
- (2) 시범사업 추진, 부처 간 협력 등을 위해 각 분야의 관계자,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한다.
- (3) 자치·돌봄·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·면·동의 관련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,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.
- (4) 청년일자리 지원(행안부), 자활사업단·자활기업(복지부) 등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
(5) 관련 사업 연계 추진계획 및 그 성과에 대해 합동으로 홍보를 실시하고, 우수사례를 발굴·확산시키는데 적극 노력한다.

제3조(효력)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,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제4조(협약의 해석 등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3개 부처가 합의하여 결정하고, 필요시 서면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2018년 9 월 11 일

행정안전부
장관
김부겸

보건복지부
장관
박능후

국토교통부
장관
김현미